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염철호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권오규
	한국형 n분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SOC정책 방안 연구	성은영
	로컬리듬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서수정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임유경
수시 과제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고영호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계획 기준 마련 연구	김상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조시은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여혜진

기본과제

①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화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대두되었으나,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서 주거뉴딜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업방식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세어하우스, 공동체주택과 같은 새로운 주택유형이 등장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생애주기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그치거나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주택공급방식으로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과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요구,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한 대응을 공공이 모두 직접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민간주체가 주택시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시장논리에 따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은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분양아파트 단지와 수익형 부동산으로 불리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된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양(소유)가치 중심의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설계·운영에서의 거주자 참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커뮤니티 증진,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등 거주가치 중심의 주택사업방식은 여전히 불안정한 사업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공공 주도로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물론 필요하나, 이와 함께 민간 주택시장에서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거주 가치를 구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거주 가치 중심의 새로운 대안적 주택공급의 시도들이 다양한 주택사업방식으로 시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거주 다양성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인 공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염철호

②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스마트도시는 정보와 물리적 자원을 결합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IOT, 스마트폰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시서비스가 제안되고 있지만, 사용자 편의와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많은 기술이 외면받고 있다.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환경과 문제를 이해하고 실사용자인 시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 또는 공간 단위의 서비스 공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신규 서비스를 공급한 이후에는 이전의 서비스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에 필요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로서 시민의 평가의견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최근의 스마트도시는 도시 '공간 단위'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협업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 참여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시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스마트도시 조성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단계를 살펴보고 시민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지원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의 시민참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오규

③ 한국형 n분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SOC정책 방안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책을 달리하여 근린 내 접근성에 기반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월, 파리시장 안 이달고(Ane Hidalgo)는 재선 공약으로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생활을 기반에 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파리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를 발표하였다. 15분 도시와 같은 '시간도시계획(Chrono-Urbanism)'은 이미 보고타의 활력 있는 근린(Bogotá's Barrios Vitales), 포틀랜드의 완전한 근린(Portland's Complete Neighbourhoods), 멜버른의 20분 동네(Melbourne's 20 Minute Neighbourhoods) 등 다양한 정책 및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파리의 15분 도시 이후에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의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서울오아시스네트워크(김진애)', '21분 콤팩트도시(박영선)', '10분 역세권(나경원)', '15분 부산(박형준)' 등 다양한 n분 도시를 정책 어젠다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은 피할 수 없는 지구적 과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되고 있는 n분 도시 논의는 우리나라 도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유효할 것이

다. 그러나 n분 도시의 실현은 지구(planet)와 도시(city)의 지속가능성, 건강한 사회, 개인의 삶의 질 등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선, 시설공급, 일시적 토지 이용 등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층위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생활SOC 확충 정책으로 대표되는 시설의 공급을 통한 단순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n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설계 방법과 구체적 실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들의 달성 가능한 n분의 현황을 근린환경의 요소에 따라 각각 도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근린 단위의 설계 전략과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은영

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2014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447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규모와 쇠퇴원인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주택수요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생상가와 어울림플랫폼을 비롯한 과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대도시와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비지원사업 종료 이후 거점 시설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중소도시에 적합한 재생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로컬리즘을 지향하는 다양한 주체가 중소도시의 가치를 찾아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위 로컬리즘을 지향하는 사람

들은 대도시나 서울에 비해 낮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여유 있는 공간, 지역의 자연경관과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차별적인 사업화 전략 가능성 때문에 지방중소도시에 정착하면서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지원사업에서는 이러한 지역활동주체와 긴밀한 연계와 협업체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로컬 지향의 주체들은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안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시는 로컬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로컬벤처, 로컬 크리에이터 등의 지역활동주체가 있거나 도시재생사업 이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던 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중소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로컬리즘 시각에서 진단하고, 중소도시 특성을 고려한 재생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중소 도시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누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지역만들기의 핵심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경제, 문화, 교육 등), 지역주민과 다양한 활동 주체들 간의 연결망과 협력방식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로컬리즘 기반의 핵심동력인 지역활동주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재생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국비지원방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수정

2005년 12월에 출범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법」의 규정 일부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 시행 이후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등지에 69개 구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공동주택 단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역 지정 신청 권한을 다변화하고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왔다. 특히 2020년 4월 법을 개정하여 지정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한옥 10동 이상, 한옥 외의 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민간제안제도 신설되고 특례사항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제도 적용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구역 지정 및 건축물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역시 보다 정교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후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정 절차, 지정 심의 시 검토사항, 특례적용 및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 심의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임유경

①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1,000만 명 돌파를 전망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2067년 전 국민의 47.8%가 고령자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를 발표하고 도시와 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에 기반한 고령사회 대응을 주문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시와 지역사회 고령친화도 진단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우선 추진 분야를 결정하는 패키지 방식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단위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를 웹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진단결과 도출과정과 결과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을 보건의부의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를 활용한 고령친화지구 지정 등의 정책 발굴과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으로 연계를 계획하였다. 지자체의 객관적 고령사회 대응 상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마련과 적용을 통해 국가는 기존의 의견 기반 통계자료(노인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등)가 갖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별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고려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단위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량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적용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제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공개된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지역 유형별 고령친화도 점검 지표를 도출하고 통계식을 통한 고령친화도 도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스스로 고령친화도 점검과 정책 영역별 우선 추진 과제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고영호

②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계획 기준 마련 연구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공공기여의 수단 또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 재정비계획 등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공공기여의 유형이 과거의 도로 공원,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 위주에서 최근에는 복지 문화 경제활성화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이러한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프로그램 미확정 단계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결정되어 이용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과 함께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자가 결정되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절차에서 공공건축물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질적 관리를 위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최근에는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연구는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조성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내실화를 위한 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급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호

③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2021년 3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교육부는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건물 중 총 2,835동을 그린스마트 미래형 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서 기존의 학교시설 공간혁신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저탄소 시설 조성 및 디지털 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주요 추진 내용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혁신,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체험형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조성, 지역 사회 연계를 도모하는 학교 복합화로 구분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실현 및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획단계 업무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2021년 5월 교육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단계 사업절차 및 업무와 관련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사전기획을 ‘미래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최적의 공간구성을 기획하는 기본구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와 매우 유사하나 내용의 범위 및 주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는 현재 추진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을 사업추진체계 방식과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실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내용을 도출하고,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획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시은

4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농촌마을은 도시보다 급격하게 초고령화,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상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특별·광역시에는 전혀 없는 반면 군은 32곳에 이른다. 70세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의 약 45%이고, 헌법에서 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부의 농지소유는 총 농지면적의 56%에 그치고 있다. 전국 농촌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35.4%, 빈집은 6만 1,000동에 이른다. 농촌마을의 기존 환경은 노후화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개별입지 공장과 에너지 시설은 난립하고 있으며, 산간계곡부에는 전원주택이 듬성듬성 개발되고 있다.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축사도 취락 인근에 위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정책은 농업 중심 농촌정책에서 농촌공간정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자연과 자원의 보전, 식량보급, 여가·휴양·관광장소 제공,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등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마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현황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기반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생활유지와 농지의 보전 그리고 다음세대 토지이용까지 포함하여 대응하기 위한 공간관리 모멘텀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농촌마을의 인구가 공동화되어도 농정의 기반이 되는 농지와 국토공간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공동화되는 농촌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이용상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고 주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심지로의 접근성과 중심지의 생활서비스 제공수준, 그리고 농촌마을의 생산 및 생활공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공간의 토지이용 근접관계를 재설정하고 공간적 질서를 갖추기 위한 공간관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정책의 방향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혜진

2021 제3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근대도시건축연구회는 지난 9월 10일(금) 제3회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01년 등록 문화재 제도 시행 이후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최근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근현대 건축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 관련 제도의 성과와 쟁점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송석기 근산대학교 교수의 '근현대 건축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이슈'를 통해 건축유산 보존에 있어 공공의 개입 정도에 대한 조절과 세분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방안 등을 짚어보았다. 이어 이규철 부연구위원의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제도의 현황'에서는 관련 연구와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건축자산화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건축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본 근현대 건축자산을 결정하는 가치와 건축 자산화를 위한 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성원 강희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명선 선문대학교 교수, 김주야 시간과공간 연구소, 주상훈韓헤리티지센터 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auri

2021년 제3회
건축공간연구원 -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공동 학술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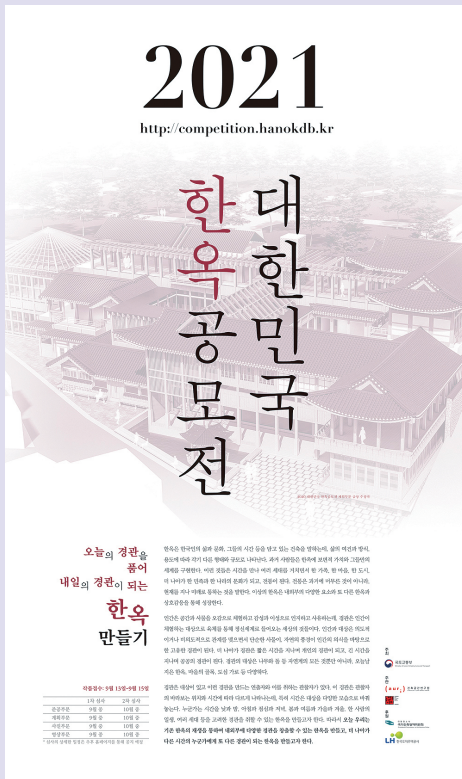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21. 9. 10. 금 14:00-17:00

온라인 세미나 zoom
<https://us02web.zoom.us/j/81311526913> : 회의 URL
 813 1152 6913 : 회의 ID

14:00 - 15:20	제1부 - 주제발표
기	이
15:20 - 15:30	휴식
15:30 - 16:30	제2부 - 종합토론
16:30 - 17:00	휴식
17:00	제회

주 최 | (auri) 건축문화연구소 (사) 근대도시건축연구회 실천을 위한 모임
 주 관 | 건축문화자산센터(건축공간연구원), (사) 근대도시건축연구회 실천을 위한 모임



심사 일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준공부문	9월 중	10월 중
계획부문	9월 중	10월 중
사진부문	9월 중	10월 중
영상부문	9월 중	10월 중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열렸다. 2011년 이후 올해로 열한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를 주제로, 기존 한옥의 재생을 통해 내외부에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한옥을 만들고, 나아가 시대와 대상을 고려한 경관을 담은 한옥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모전은 계획, 준공, 사진, 영상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는 준공 부문에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을 신설하였다.

준공 부문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29일 사이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자·건축주·시공자 중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 부문은 공모전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하며, 4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사진·영상 부문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한옥의 아름다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모집하였다.

작품접수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중 1차 심사를 마쳤다.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의 자세한 일정은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2021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

auri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건축공간연구원 등 여섯 개 기관이 후원한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건축, 탄소중립을 향하여 (Green Building for carbon neutral)'를 주제로, 9월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식 등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한미 ZEB Insight Forum, 주제별 녹색건축 콘퍼런스 및 세미나, '녹색건축대전'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 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를 통하여 녹색건축 기술 확산을 위한 친환경 건축부터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제로에너지건축(ZEB), 그린리모델링까지 녹색건축에 대한 전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사 둘째 날인 9월 29일 '탄소중립정책 콘퍼런스'를 마련하였다. 콘퍼런스의 주요 프로그램은 건축공간연구원 허하결 부연구위원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충북대학교 이학성 교수의 '일본의 탄소중립 건축정책 동향', 건축공간연구원 박종훈 부연구위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물 단위 소규모 녹지의 열섬저감 계획', 지석환 연구원의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의 탄소중립 정책 현안' 등으로 구성되어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녹색건축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시상 내역

구분	건수	포상	포상종류
대상	1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 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1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 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상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월)부터 10월 15일(금)까지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입안자와 국민이 함께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공모전 작품을 통해 한국 건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모전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http://idea.aurum.re.kr>)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영상·포스터·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이 담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은 창의성·필요성·작품성·효과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축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모두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공모전에는 총 5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미래 건축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영상물로 제작한 ‘소소한 변화부터 차곡차곡!’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